



사회보장정책 분석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2020년 현재 정부재정 기준 192.8조원이며, 정부재정에 포함되지 않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할 경우 267.4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래 연평균 10%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총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는 사회보장지출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각각의 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현행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 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 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분석대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소득 보장

공적연금, 특수직역연금

생계급여, 자활급여

고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 분야 사회서비스

사회 서비스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 문화, 환경 분야 사회서비스

건강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 분야 사회서비스

주거

주거급여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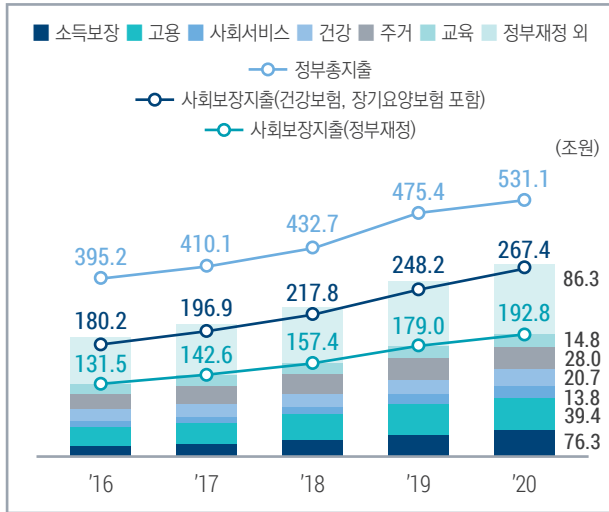
교육급여

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I. 사회보장지출의 규모

사회보장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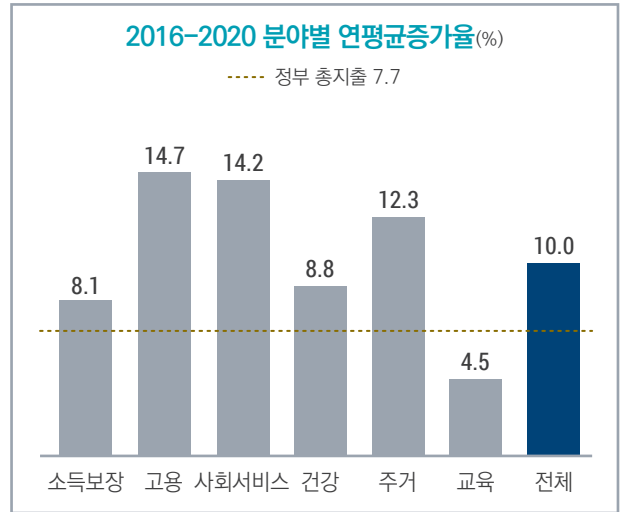
2020년의 사회보장지출은 192.8조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시 267.4조원)



* 합계는 중복분 제외

분야별 지출규모 증가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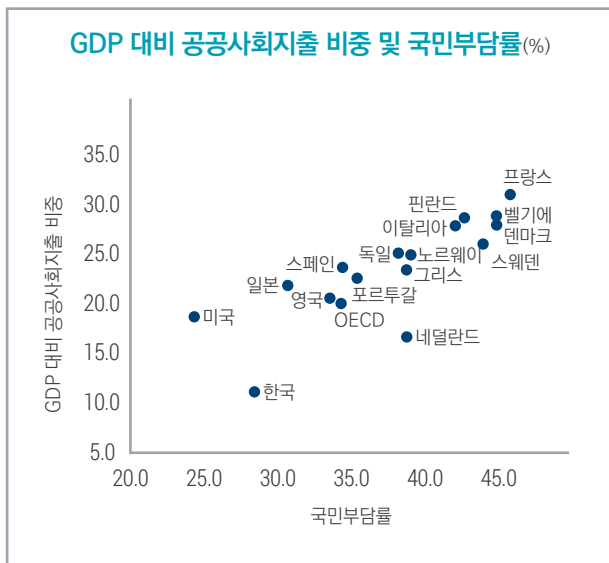
사회보장지출은 정부총지출보다 빠른 증가 추세
특히 고용 및 사회서비스분야가 빠른 속도로 증가



II. 재정적 지속가능성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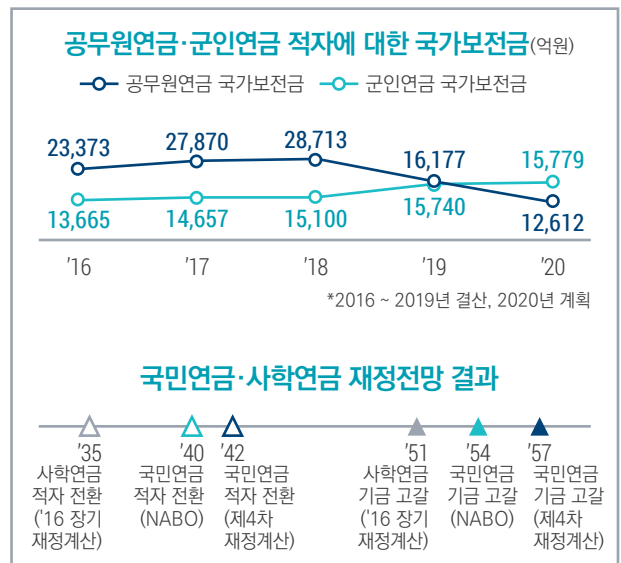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이 비교적 낮음



증가하는 사회보장지출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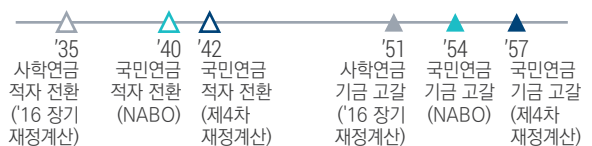
공적연금 재정지속가능성 강화 필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재정적자 지속, 국민연금·사학연금
기금 고갈 전망



*2016 ~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

국민연금·사학연금 재정전망 결과



공적연금 각각에 대한 재정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

III.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미가입, 적용제외, 보험료 장기체납, 사업장의 은폐 및 미보고 등으로 발생

사회보험사각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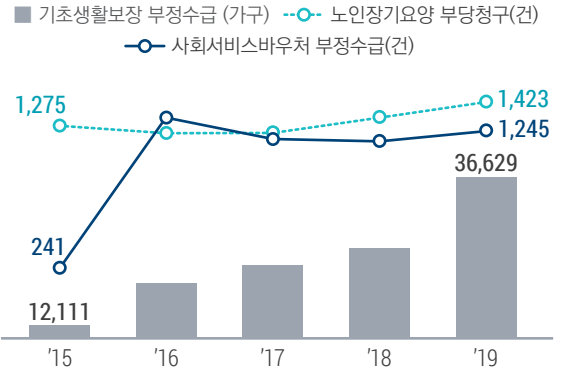
사회보험	가입자		미가입자
	장기 체납자	납부예외자	
공적연금	13개월 이상 체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6개월 이상 체납 지역가입자	-	-
고용보험	3개월 이상 체납 자영업자	-	① 비임금근로자, ② 적용제외, ③ 당연가입 대상 중 미가입자
산재보험	체납한 임의가입 사업장	-	타법에 따라 재해보상,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임업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등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제도별로 보험료 지원, 가입대상 확대, 미보고·은폐에 대한 적발률 제고 등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부정수급 등 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

사회보험의 확대에 따라 부당청구, 부정수급 등이 증가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적발사례 증가 추세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부당청구·부정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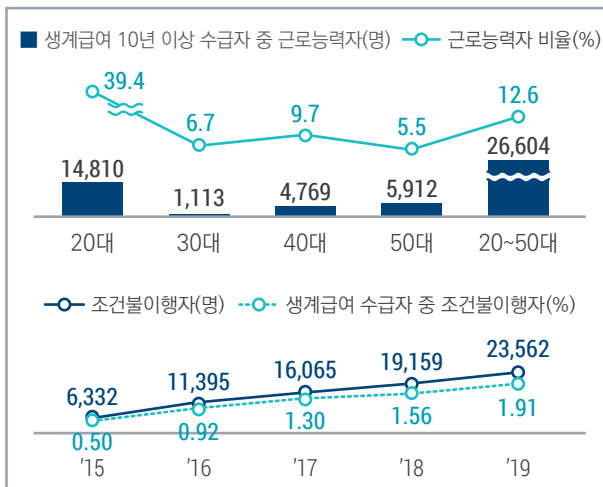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철저한 수급자 관리,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 등 필요

IV. 분야별 주요 분석의견

[소득보장] 생계급여 장기수급자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생계급여 10년이상 수급자 중 근로능력있음 판정자는 12.6%, 조건불이행자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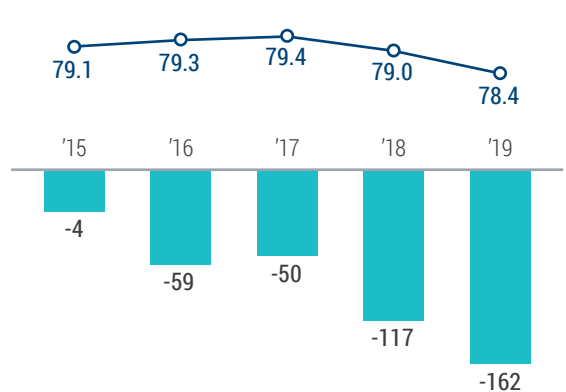


근로능력판정방식의 적정성 검토 및 근로능력 있는 장기수급자의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고용]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기적 일자리 정책 필요

최근 3년간 40대 고용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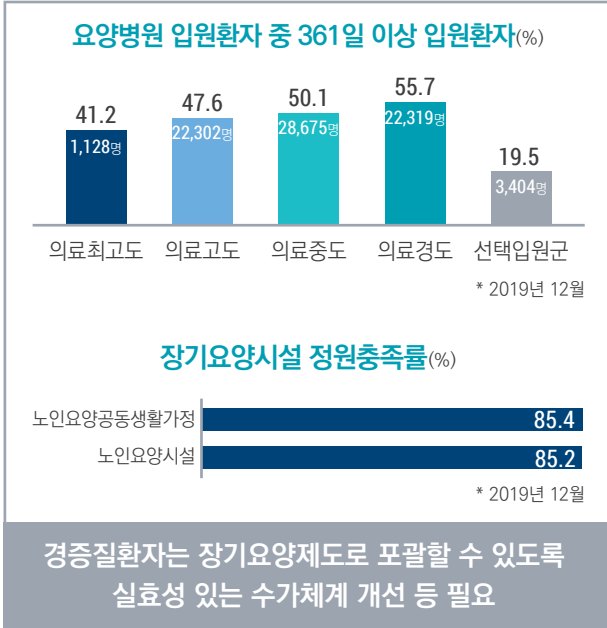
40대 고용 지표(고용률, 전년대비 취업자 수)(%, 천명)



40대 고용시장 악화의 원인으로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정책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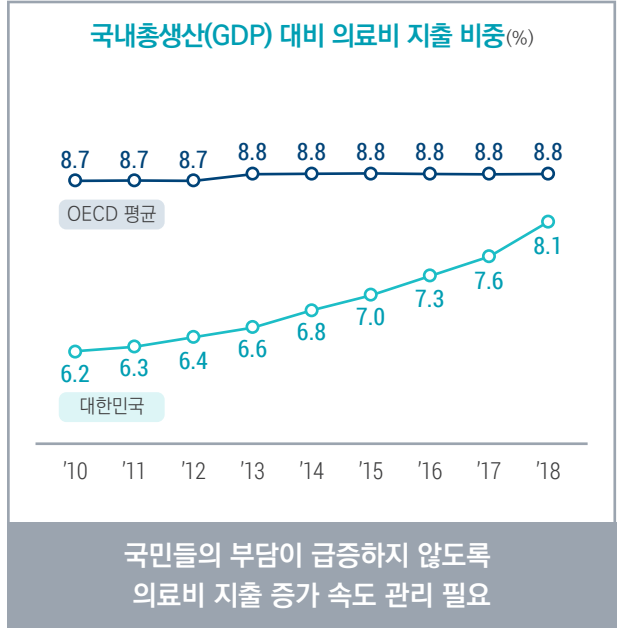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효율적 역할분담

요양병원에 경증환자 장기입원 문제 지속, 장기요양시설 정원은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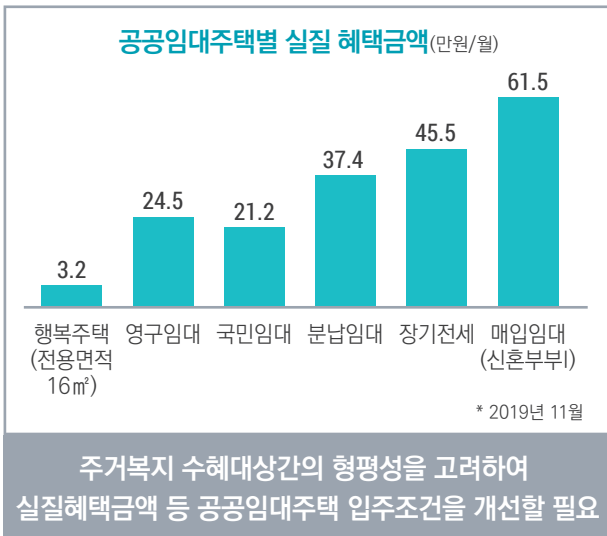
[건강]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 관리 필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지출 비중은 8.1%로 OECD 평균인 8.8%보다 낮으나 증가속도가 빨라 수년 내로 OECD 평균 초과 예상



[주거] 실질 혜택규모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공공임대주택별 실질 혜택금액은 3.2~61.5만원/월으로 다양하게 분포



[교육] 교육영역별 재정 배분 점검 필요

교육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유·초·중등교육 비중은 감소하고 고등교육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교육재정의 배분은 이와 반대인 상황

